

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회의 개최

- 상품권 예약판매 등 **변종 불법사금융 철저 단속** 및 **피해자 지원** 추진
 - 불법사금융 근절 방안('26.2.6일 발표) **후속조치 점검** 및 **보완방안** 논의
- 【관련 국정과제】 66(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) - 금융범죄 단속 강화

□ 정부는 5.21일(목)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세 번째* 「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」 회의를 개최하였다.

* 제1차('25.9.11일, 국무조정실 제2차장 주재), 제2차('26.2.6일, 국무조정실장 주재)

- (일시/장소) 5.21.(목) 14:00~15:00 / 정부서울청사 9F 대회의실
- (참석기관) 국무조정실장(주재), 금융위원회, 법무부, 대검찰청, 경찰청,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,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, 금융감독원, 법률구조공단, 서민금융진흥원, 신용회복위원회

1. 개최 배경

□ 그간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불법사금융에 대해 적극 대응해 왔고 유의미한 제도 개선 진전*이 있어온 것도 사실이나,

* 연 60%를 초과하는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의 이자·원금 무효화(대부업법 개정, '25.7월), 피해자 구제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'원스톱 종합·전담지원체계' 구축('26.3.9일) 등

○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수법 등으로 불법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, 범죄 단속 및 피해자 구제*가 시급한 상황이다.

* 상품권 사채를 이용한 뒤 불법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30대 여성 사례 등('26.4월)

<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변종 불법사금융 실태>

- ①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상품권을 파는 것처럼 계약을 맺고, 사채업자가 미리 대금을 지불하고, 향후 고리의 이자를 붙여 상품권으로 상환 요구
- ② 최근 인터넷 카페·SNS 등을 경유하여 이러한 신종 불법사금융이 급속도로 확산
- ③ 외관상 정상적 계약 형태를 띠다보니 피해자가 상품권 미상환시 불법사채업자가 상품권 거래사기라며 피해자를 오히려 협박하고,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

2. 주요 논의내용

- 정부는 외관상 상품권 매매를 가장하더라도 거래 실질을 고려하여 상품권 예약판매도 대부업법이 적용되며, 대부업 등록 없이 반복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자로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하였다.
- 상품권 예약판매 피해자도 일반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동일하게 ‘원스톱 지원체계’(‘26.3.9일 마련)’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.
 - * 피해자 신고 즉시 전담자를 배정하고, 연 60% 이자율 초과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발급(금감원) 및 ‘정부’ 개입 사실 경고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전달
- 또한 불사금융업자가 피해자를 ‘사기 피의자’로 고소하거나 이미 사기죄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*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지원하기로 하였다.
 - * 확정판결시 업자에게 배상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민사소송인 ‘청구 이의의 소’(판결문, 지급명령 등 상대방이 지닌 집행권원의 효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) 지원
- 특히 인터넷 카페 등이 사실상 이러한 사채들을 중개하고 있는 만큼, 카페 폐쇄, 유사카페 개설 금지, 카페 운영자 수사 확대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.
- 한편, ‘26.2.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‘불법사금융 근절 방안’ 추진 과제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고, 보완방안도 논의하였다.
- 후속과제 20건 대부분이 관련 법령 개정·시행 등 차질없이 추진 중*인 것으로 나타났다.
 - * 유관기관 합동 ‘원스톱 종합·전담지원체계’ 구축(3.9일), 범죄이익 국가몰수(‘26.11월 법시행), 실소유주·자금원천 불분명시 계좌 차단 및 피해자 소송 지원(3.9일), 일정수준 이상 온라인 플랫폼 불법정보 자율 운영정책 마련 의무화(‘26.7월 법시행) 등
- 다만, 대부업 광고시 발신자 표시제한 의무화, 채무자대리인 제도* 실효성 확보 등 일부 과제는 추가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다.
 - * 채무자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시 채권자의 채무자 직접추심이 금지됨(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§8의2) : 불사금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구조공단이 무료로 선임 지원 중

3. 국무조정실장 당부사항

-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향후에도 변칙적인 신종 불법사금융 행태들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,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하여 철저히 범죄를 단속하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.

- 또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은 관계부처·유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협업하여야만 비로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,
- 정부는 불법사금융 근절 TF를 중심으로 원팀(One-Team)으로서 지속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<총괄>	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	책임자	과 장	윤영주 (044-200-2190)
		담당자	사무관	임만혁 (044-200-2187)
	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	책임자	과 장	임형준 (02-2100-2510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록 (02-2100-2513)
	법무부 형사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재철 (02-2110-3547)
		담당자	검 사	한웅세 (02-2110-3718)
	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우석 (02-2110-15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상현 (02-2110-1567)
	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	책임자	계 장	진우경 (02-3150-2763)
		담당자	경 감	윤여원 (02-3150-0886)
	대검찰청 형사3과	책임자	과 장	김윤정 (02-535-4364)
		담당자	수사관	박민균 (02-3480-2855)
	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	책임자	국 장	임정환 (02-3145-8270)
		담당자	팀 장	장종현 (02-3145-8129)
			팀 장	민혁진 (02-3145-8277)
	신용회복위원회 고객서비스운영부	책임자	부 장	김상초 (02-750-1201)
		담당자	팀 장	서동백 (02-750-1110)
	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부	책임자	부 장	윤석민 (02-2128-8320)
		담당자	과 장	오장원 (02-2128-8273)
	대한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	책임자	부 장	석희상 (054-810-1061)
		담당자	과 장	김봉규 (054-810-1062)